

무질서와 혼돈 벗어나야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5개 노조가 연대해 노동3권 보장 등을 외치고 있다. 한편, 철도의 민영화 철회나 주공·토공 통합백지화 과정에서 노조의 입김은 이미 강하게 작용했다. 목소리 높이고 파업만 벌이면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총체적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기능이 마비된 부산항과 광양항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정부의 '백기투항식' 양보로 정상적인 모습을 겨우 되찾았다. 교육 전산망(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대·기아 등 자동차업체에서는 생산라인 조정 등의 문제로 노사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등 5개 노조가 연대해 노동3권 보장 등을 외치고 있다. 한편, 철도의 민영화 철회나 주공·토공 통합백지화 과정에서 노조의 입김은 이미 강하게 작용했다. 목소리 높이고 파업만 벌이면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다.

항만이나 다리 이름 하나 붙이는 것에서부터 고속철도 터널 통과 지점 결정, 납골당 위치선정 문제 등에 이르기 까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갈등과 대립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중심을 잡아야 할 관료들은 소신있는 처신을 하지 못하고 이번 물류대란에서 드러났듯이 서로가 핑퐁치기식 책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부내에 위기를 수습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오죽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현재는 위기상황 대처에서 공백이다”라고 까지 했겠는가.

정치권의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신당창당을 놓고 신주류니 구주류니 편가르기와 세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경제불황이나 사회혼란 등은 남의 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야당은 전당대회와 당대표 경선에 관심을 집중시킬 뿐 민생과 국가 현안을 챙기는 일에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너지는 국가 기강

국가기강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97년 부즈엘런 해밀턴 보고서는 한국이 5~10년 이내에 동북아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생존에 괴로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는 강대국과 경쟁국 사이에 끼어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30개 경제권중 15위로 5단계나 떨어뜨렸다. 국제투자나 법적·제도적 환경,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매겼다. 말레이시아나 중국, 태국 등에게도 밀리는 처지가 됐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슬로베니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수준이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는 증표다.

왜 여기서 우리는 우와좌왕해야 하는가. 일류국가의 꿈을 접은채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국가 시스템이 개선되고 영(令)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대통령은 더 이상 감상주의나 이상에 빠져서는 안된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 일부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슬로베니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수준이다. 우리가 아직 선진국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는 증표다.

집단만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도 곤란하다. 노 대통령이 취임직전 양대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 것이 오늘의 화를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두산중공업이나 철도 파업 사태에서 정부는 노조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다.

철(鐵)의 정치인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이 노조의 불법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뜯어 고치겠다고 기존 정책을 뒤엎고 세대교체를 한다고 고위 관료들의 옷을 한꺼번에 벗겨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국정불안을 초래하는 단절보다는 ‘연속’을 원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취임직전에 개혁은 “물흐르듯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 민영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각적 검토 끝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발전 부문 분할 등 민영화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를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뿐이다.

각자 본분 다해야

대통령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집단,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배려해야 한다. 한쪽 집단에 너무 정을 줘서는 안된다. 관료들은 소신있게 일을 해야 한다. 노조는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독일 경제가 강성 노조 때문에 시름시름 중병을 앓게 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은가. 국가가 쇠락의 길을 걷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조에게도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어려움과 혼란에 처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있는 국민이다.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 국민모두가 협력해 간다면 한국을 국운융성의 길로 이끌 수 있다. 모두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코리아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